

지정폐기물을 처리증명제 실시구역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밝히는 폐기물처리 증명제를 11월9일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9월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증명제는 폐윤활유 등 지정된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 등 단계별로 적법처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는 최종처리자를 확인해 처리경로를 입증, 매년말에 폐기물처리 정산서를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최초 배출자가 폐기물의 인계, 인수서로 처리과정을 입증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폐기물의 인수, 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말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처리 보증제를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받는 날부터 2개월이내에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감독관청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환경호르몬 없는 수지 KT마크 획득

대림산업(주) 석유화학사업부는 독자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환경호르몬 무검출 폴리스티렌(PS)수지에 대해 국산신기술(KT) 마크를 획득했다고 지난 9월21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년여에 걸쳐 개발한 이 수지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인 스티렌다이머 및 스티렌트리머의 발

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차세대 환경친화형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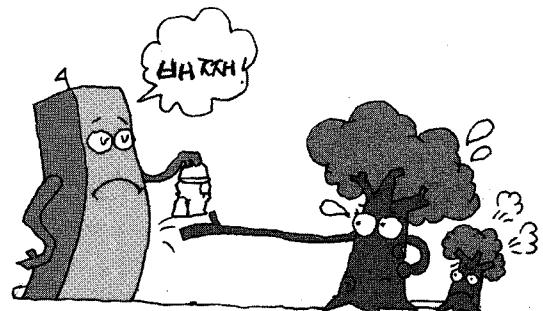
대림산업은 특히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식품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매인 물 대신 50%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폴리스티렌 수지는 가볍고 견고하며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 때문에 그동안 컵라면, 야외용 도시락, 기타 1회용 용기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대림산업은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1회용 라면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수지는 수지 자체에 스티렌다이머와 스티렌트리머가 최대 1만 ppm정도 함유돼 있어 성형을 하더라도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은 환경호르몬 무검출 폴리스티렌(PS) 수지에 대해 일본 및 국내에 특허출원을 이미 완료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대기업을 주는 환경부문투자 인색



정유회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대기업들이 지난해 1년 동안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작업중인 대우를 제외한 현대, 삼성,

LG, SK그룹 등 매출규모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4대기업들은 작년 한해동안 환경부문에 모두 6천214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의 정유사를 소유한 SK는 834억원만을 투자해 이 분야에 가장 인색했고 정유업계 2위인 LG는 모두 2천710억원을 사용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1천400억원, 현대는 1천270억원을 환경부문에 각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의 그룹별 환경부문 투자현황을 보면 지난 95년과 96년에 2천506억원과 4천830억원을 투자한 현대는 97년 1천978억원, 98년 1천270억원으로 계속 줄였다. 이에 따라 현대의 작년도 환경부문 투자액은 지난 96년에 비해 무려 3천560억원 줄어든 셈이다.

삼성도 지난 95년과 96년에는 이 부분에 각각 3천200억원과 4천800억원을 투자했으나 97년 3천400억원, 98년 1천400억원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삼성의 작년 한해 환경부문투자액은 지난 96년대비 3천400억원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 95년(3천377억원)과 96년(4천331억원)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온 LG도 97년에는 2천852억원, 98년 2천710억원으로 투자액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SK는 지난 95년에 3천767억원과 96년에 3천301억원을 환경부문에 투자했으나 97년과 98년에는 각각 697억원과 834억원만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낙동강 오염사고 원인' 기름유출 치다'

낙동강 중. 상류 일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의 55.9%가 기업체의 연료저장 탱크사고나 골재채취장 사고 등에 따른 기름유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대구, 경북지역 낙동강 중. 상류 일대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는 97년 14건, 98년 11건, 올들어 지금까지 9

건 등 모두 34건이다.

벙커C유나 경유 등의 기름오염 사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바닥 퇴적물 부상 등에 따른 물고기 집단폐사가 6건(17.6%), 횡산 등 독극물 오염 3건(8.8%), 폐수오염 3건(8.8%), 농약오염 2건(5.9%), 기타 1건(2.9%) 등이다.

특히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업체가 9건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고 하천 골재채취장 유출사고 4건(21.1%), 주유소 또는 송유관 사고 3건(15.8%), 도로에서의 차량전복 등 2건(10.5%), 기타 1건(5.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업체 등은 대부분 이같은 사고 사실을 제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바람에 방제작업이 늦어져 오염피해가 확산되고 엄청난 인력과 수자원 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골재채취의 경우 대부분 하천안에서 준설선을 설치, 작업하기 때문에 유류가 유출되면 곧바로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하상 밖에서 골재채취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질오염 사고의 48.3%는 인재

수질오염 사고는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취급자의 부주의 등 인재에 의한 것이 절반가량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5일 '연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1월 7건, 2월 3건, 3월 15건, 4월 10건, 5월 6건, 6월 6건, 7월 9건, 8월 2건 등 올들어 8월까지 모두 58건의 각종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질오염사고 가운데 관리나 취급부주의 등 인재에 의한 것이 20건(34.5%)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업장 근무자의 관리감독이나 정비, 보수 잘못 등으로 인한 기계고장 8건(13.8%)까지 포함시킬 경우 인재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48.3%나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이 63.8%(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오염물질 유출과 물고기 폐사사고 등 수환경변화 12.1%(7건), 유해물질배출 6.9%(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 유출사고의 경우 3월(11건), 4월(8건), 7월(6건) 등 3개월 사이에 모두 25건 발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수질오염 사고는 지난 94년 146건, 95년 83건, 96년 65건, 97년 65건 등 감소추세를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 관리여건이 악화된데다 급격한 수환경변화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사고와 물고기 폐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112건으로 늘어났다가 올들어 다시 줄어드는 추세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쓰레기 소각로 부산물 처리기술 도입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쓰레기 소각로 부산물인 비산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국내에 도입됐다.

신우환경기술개발(대표 홍성도)은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비산재 처리를 위해 스위스의 종합 환경업체인 '도이치 바브록' 그룹 산하 'CTE'사와 기술 도입계약을 했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비산재는 납,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는 유해물질로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지역 이외에는 직접 매립이 금지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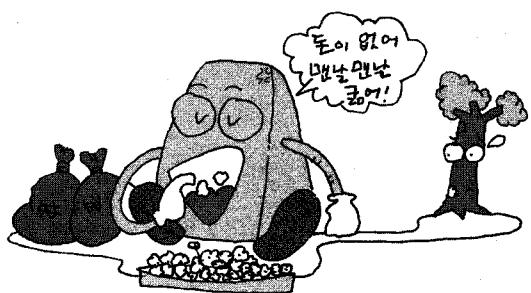
신우환경기술개발은 이날 오후 시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CTE사와 공동으로 '비산재 고형화 처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신기술은 비산재를 알칼리 용해후 시멘트와 특수첨가제를 첨가해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 (고형화) 오염물질의 분출을 1천년간 막는 기술이라고 이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비산재 처리기술은 스위스 정부가 CTE사와 500만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로 국내외에서

소개된 쓰레기 소각로 비산재 처리방안 가운데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해결방안"이라며 "특히 최근 매립장 건설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도시 소각로 부산물 처리문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환경설비 투자 길수록 줄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중공업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환경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계속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제철의 경우 96년에는 모두 1천694억원을 환경분야에 투자했으나 97년 1천397억원, 98년 628억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96년 168억원을 이 부분에 투자한 강원산업도 97년 26억원, 98년 5억8천만원으로 계속 투자액이 줄었다.

시멘트업종도 상황이 비슷해 97년 환경부분에 61억원을 투자한 동양시멘트는 97년 56억원, 98년 49억원으로 줄었으며 현대시멘트 역시 지난 96년에는 4억9천만원을 투자했으나 98년에는 2억9천만원으로 투자액을 낮췄다.

석유화학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주)SK의 경우 96년에는 5천924억원을 투자했으나 97년 705억원, 98년 275억원으로 투자비용을 계속 줄였다.

LG-칼텍스정유(주) 역시 96년에는 2천328억원을 환경분야에 투자했으나 97년 2천108억원, 98년 581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전자업계의 경우 삼성전자(주)는 96년 1천254억원을

투자했으나 97년 1천4억원, 97년 1천억원으로 환경부분 투자를 줄였으며 현대전자산업(주) 역시 96년 967억원, 97년 592억원, 98년 368억원으로 계속 줄여왔다.

특히 LG전자(주)는 96년 253억을 환경분야에 투자했으나 97년 133억원, 98년 32억원으로 투자액이 급감했다.

통신업종에서도 대우통신(주)이 96년과 97년에 5천 700만원과 1천900만원을 각각 투자했으나 98년에는 불과 200만원만 환경부분에 사용하는 등 투자 기피현상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초기단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련법령 너무 자주 바꾼다"

환경관련 법령이 너무 자주 개정돼 법집행의 일관성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조직과 관련된 법규를 제외하고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환경부는 법률 36차례, 시행령 19차례, 시행규칙 32차례 등 모두 87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이는 작년의 38차례, 지난 97년의 33차례에 비해 각각 49차례와 54차례 늘어난 셈이다.

환경부는 올 들어 지난 상반기에만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등 전체 환경법률의 3분의 1 가까운 10개법률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를 다시 법제처의 검토단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먹는물관리법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월 2일에 재개정안이 입안되어 같은 달 28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다시 지난 8월 30일 세 번째 개정안을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입법계획률은 46.6%로 나머지 20개 정부부처의 입법계획률(19%선)보다 2.4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환경관제법령을 개정하는 바람에 집행의 일관성이 물론 신뢰성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오염 원격감시 체계 구축키로

해양수산부는 시화호에 고정구조물을 이용한 해양오염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동화된 해양오염 측정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류, 중금속 오염물질 등의 해양오염 현황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 학 협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으며 이를 고정구조물에 부착, 해양오염실태 및 오염부하량을 측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한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자동측정시스템을 부착해 선박항로를 따라 해양오염을 원격자동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조 발생해역에도 원격감시 체계를 구축, 적조 예방 및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인천과 제주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에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화호 고정구조물에 해양오염 자동측정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1년까지 해양오염자동측정시스템을 상품화해 이를 인근국가 및 관련업계 등에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오염측정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원격자동측정 시스템을 개발, 운용중"이라며 "앞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환경오염때 국내법 준수 명문화"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의왕 미8군 부대 기름유출 사고의 처리를 위해 이달중 한미주둔군지 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정식안건으로 다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또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SOFA 개정 협의에서 주한미군이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국내법을 준수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의왕시 미8군 메디슨부대 주변의 수질과 토양에 대한 잔존 유분의 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링 조사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간 미군측의 기름제거 작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추가조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이달초 실시했던 현장조사에서는 메디슨부대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까지의 계곡물에서 여전히 기름이 섞여나오고, 토양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이어 이달말께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메디슨부대 환경오염사고의 향후대책을 정식안건으로 다를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SOFA 개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4년간 안전으로 계류중인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의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오염자 부담원칙을 골자로 하는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안을 협정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해성 집단괴질(온산병) 후유증 심각

최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인접 주민 10여명이 지난 80년대 중반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공해성 집단 괴질(일명 온산병)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10월 13일 지난 80년대 중반 온산병을 앓았던 주민 5백여명 중 10여명이 최근 혈액장애로 피가 통하지 않아 허벅지와 풀반 사이의 관절 뼈가 썩는 이른바 골수 무혈성 괴사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산읍 당월리 출신 김모(56, 부산시 거주)씨의 경우 지난 84년 온몸이 마비되고 다리관절 통증을 느낀 후 양쪽 대퇴부 뼈가 약해져 지난 85년과 95년 2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앓거나 설 때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온산읍 이진리에서 20년 가량 해녀생활을 했던 서모(48, 여)씨도 관절 통증으로 현재 노동력을 상실하고 항상 다리를 폐고 앓아야 하는 등의 생활 불편으로 지난 92년 무혈성 괴사 수술을 받았다.

이밖에 이모(68)씨도 당시 앓았던 온산병 때문에 걷기가 불편한 증세를, 이모(62)씨는 뼈가 부서지는 증상과 함께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 지역 주민 10여명이 당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날 환경부와 울산시에 정부 차원의 주민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한편 이 지역은 지난 85년 10월 정부에 의해 환경오염에 의한 집단 이주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1만 1천여명이 온산읍 덕신리 일대로 집단 이주했으나 현재까지 온산읍 이진리에는 1백여명의 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